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6326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2203909)	2024.09.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4.11.25.) 상정/의결(대안 반영폐기)
	김종양의원 (2203991)	2024.09.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4.11.25.) 상정/의결(대안 반영폐기)
	김종양의원 (2204080)	2024.09.1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4.11.25.) 상정/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11.25.)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3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 39조의2 신설),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나.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4조의2 신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7조제7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 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법 제 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

를 개발·조사·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경찰청장은 제1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개발·조사·작성·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를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신 설></u></p>	<p><u>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u></p>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
⑥ (생략)
<신설>

제16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조사·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찰청장은 제1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개발·조사·작성·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